

## ■ 토론

# 한국의 민주화이행과 과거청산



▶ **손호철** :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월례학술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주화 이행과 과거청산입니다.

진행방식을 말씀해드리면, 상당히 조희연교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 및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과거청산의 통합'이라고 하는 상당히 책 한 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발표문을 발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조희연선생님 글은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만 이미 발제문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20-30분 정도 발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기회를 드리시고, 그리고 다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또 뜨거운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청중 가운데 질문하실 기회, 그리고 다시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희연선생님 발표하십시오.

▶ **조희연** : 이렇게 첫 번째 발표에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글은 뒷부분에 보론이 있습니다만, 그 보론은 최근의 문부식씨 논쟁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라든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의 존재론적인 문제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크게 보면 국가폭력에 대한 이해와 과거청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과거청산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의 발견보다는 지금 현재 87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그 일부로서 최근의 의문사 진상규명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혹은 진보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봐야 하는냐 하는 것을 제가 썼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문부식 논쟁에 접하여 현재의 과거청산이 '과잉과거청산'이 아니라고 하는 논지하고도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폭력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보통 국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일정한 영토적 공간내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라고 규정합니다. 국가의 폭력은 위임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권력이 민중들의 저항폭력이나 테러와 다른 것은 그것이 동의받은 폭력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그 폭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국가본질로서의 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국가본질로서의 폭력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무제한 표출되는 것은 아니



죠. 매번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본질로서의 국가폭력이 예외적 상황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죠.

그런 국가폭력이 발현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기는 근대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사실 근대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이전까지의 수천 년간 민중들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 폭력 행사 규칙을 만들도록 강제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근대이후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동의에 기초해서 행사되지 않을 때, 그것은 민중적 저항을 받게 되고, 그것은 체제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의 받지 않은 폭력에 대해서 처벌과 도덕적 정치적 단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거청산의 동학에 대해 말씀드리죠. 여기서 과거청산이라고 할 때,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를 포함해서 의문사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나아가 4.3항쟁에 관한 최근의 명예회복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87년 6월 항쟁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민주개혁, 즉 과거의 독재적·폭력적 체제, 그리고 폭력적 체제 하에서 자행된 국가적 범죄의 개혁 혹은 반민주적 체제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 민주개혁의 한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개혁, 그 일부로서의 과거청산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성격은 무엇이나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적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청산은 현재적 권력관계에 의해서 그 범위와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청산이 가능한 정치적 공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확대해서 얘기하면, 민주개혁이 수행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민중투쟁에 의해서, 계급적 투쟁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듯이 87년 6월 항쟁은 성공이면서 동시에 실패이죠. 어떻게 보면 군부정권을 퇴진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이지만, 6.29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면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과 관련, 두 가지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규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역사적·현재적 권력관계, 역사적·현재적 권력투쟁이 부여하는 지형을 뛰어 넘어서 전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

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87년 6월 항쟁이 혁명으로 귀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절의 성공이자 반절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87년 이후의 민주개혁과 과거청산의 거시적 공간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독재정권의 국가범죄를 자행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거시적 제한성이나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주체적 실천에 따라서 과거청산이나 역사청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7년 6월 항쟁 이후 과거청산이나 민주개혁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전개됐습니다만, 87년 이후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 그런 거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지그재그로 과거청산이 전개되는, 그런 양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뒤에 논의가 되겠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국가기구,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요원의 제도적 복합체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내 계급적, 사회적 투쟁이라는 것은 국가내 인적집단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과거청산이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그것을 둘러싸고서도 지배 불력이라고 할까, 권력 엘리트 내에서 여러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사회 내의 계급적 사회적 투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제 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거청산의 제 1공간은 해방이후 친일파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됐죠. 그러나 그것은 한국전쟁에 의해서, 말하자면 분단이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 처단이라는 문제는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과거청산의 제2공간이 4.19혁명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5.16혁명, 반혁명이라 할 수 있는 5.16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이 소멸되고, 과거청산은 또 오랫동안, 말하자면 잠재화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의 과거청산은 과거청산의 제 3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청산의 제3공간이 형성된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 성격을 띠면서 전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군부정권 하에서의 희생의 통계 확인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이런 희생과 과거청산, 민주주의 이행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어떠냐 하는 발상에서 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쪽에서 자료도 얻고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어떤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양상은 또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썼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의 주동력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었는데, 그 희생도 그대로 표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80년대에 그 희생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희생자 규모와 관련하여, 사회를 보시는 손호철 선생님도 가끔 그런 얘길 합니다만, 거꾸로 이런 얘길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사망의 규모가 남미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가,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실종자만도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문부식씨 논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저항운동은 동의대사태 등에서 보이듯 사람도 죽고 폭력도 있었지만 한국의 저항운동은 대단히 비폭력적이었다, 너무 비폭력적이었고 오히려 비폭력이라는 컨센서스 위에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던 한계도 있다고, 거꾸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여기도 어떻게 희생의 주된 집단이 학생이고 또 주된 가해집단은 경찰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력적 국가기구, 정보기관, 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희생자 가운데 군인이 많습디만, 이걸 사실 학생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구속자 수가 있습니다만, 예상컨대 87년에 민주화가 진전되면 국가폭력이 줄어들어야 되고,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줄어들어야 되지만,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시기까지만 보면 민주주의 이행시기에서도 말하자면 구속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국가폭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7년 6월 항쟁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87년 6월 항쟁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민주화, 즉 구세력들이 주도하는 위에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와 또 민중세력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길이 다 각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진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세력이 주도하는 타협적 민주화가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과거

의 억압적 국가기구, 억압적 국가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정도 해체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기구 내에 폭력적 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일정한 수준에서 정권이 위기의식을 갖는다든지 했을 때는, 폭력적 반성이라는 것이 표출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태우정부나 문민정부에 있어서도 이런 국가폭력과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것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위로부터의 타협적 민주화, 혹은 구 독재적 세력이 이니셔티브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을 대단히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청산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민중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한된 정치적 공간, 그 쟁취적 공간을 이용하면서 과거청산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불철저한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좀 진전되기도 하고 뒤로 후퇴되기도 하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한번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87년 6월 항쟁이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우, 일종의 임시정부가 구성되든지 임시거국내각이 구성됩니다. 임시거국내각은 지금 현재 YS나 DJ로 상징되는 반독재파 제도정치세력과 급진적 재야세력이 연합한 정부가 아마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해산될 겁니다. 국회가 해산되면 과거의 독재적 집권당은 소수당으로 아마 전락하게 될 것이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는 과거의 억압적 법제들을 개폐하고, 과거청산을 위한 새로운 법과 행동들이 아마 국회 내에서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 내에서 시민사회 내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파상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 길은 밟아보지 못했죠. 반대로 과소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위로부터의 불철저한, 제한적 과거청산이 각축하면서 전개되는 방식으로 87년 이후에 민주개혁과 과거청산이 전개되었던 것이 아



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시기를 보고, YS 정부 시기를 보고 그 다음 국민의 정부 시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상대적으로 과거청산에 정치적 공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일종의 '단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청산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과거청산이 보다 제도화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는게 과거와는 다른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문민정부와 노태우정부라고 하는 것은 구지배세력, 구지배체제의 변형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일종의 신집권세력으로의 변화라는 단절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철저하고 혁명적 방식으로 87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의 과거청산 역시, 과거청산의 거시적 한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국가정책이라던가, 국가의제, 국가의지로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는 다른 제도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청산의 거시적 한계를 규정하고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부여하는 이것은 과거청산을 한계 지우는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민중적 투쟁은 이 과거청산을 아래로부터 추동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국민의 정부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면서 그러나 과거청산의 거시적 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 정부에서의 과거청산을 복합적 과거청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형태로 추진되는 과거청산의 한 형태는 관료주의적 왜곡, 행정관료들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료주의적 왜곡을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허일병 사건의 진상규명에서 보듯이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거시적 한계, 복합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개되는 것이고, 민주화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대사태에서 보이듯이 말하자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단히, 민주화운동의 최소주의적 해석으로 자꾸 경도되며 가급적 민주



화운동관련자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나 과거청산 등은 기본적으로 기억투쟁이다.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고 어떤 기억을 어떤 형태로 어떤 문화적 양식으로 차세대에게 전달할 것이냐를 둔 기억투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독재와 억압의 기억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항해서 자신을 던지면서 싸웠던 영웅적 투쟁의 기억, 해방을 향한 희생과 투쟁의 기억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재와 억압과 학살에 대한 침묵의 기억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어떻게 형상화해서 차세대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민주화운동의 현재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독재의 우상과 싸우는 거죠. 혹은 독재세력과 지금도 잔존하고 있고, 제도적, 비제도적 권력을 갖고 있는 독재세력과 싸우는 그런 과제죠. 그래서 저는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지듯이 친독재사전도 만들어져야한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또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로 환원될 수 없는 과거청산의 과제들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이었던 문부식씨가 그동안 당대비평 등에서 쪽 논의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와 관련, 과거청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할까라는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87년 이후 현재까지 과거청산을 보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문부식씨 논의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폭력이라는 프리즘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저는 당대비평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안의 파시즘’이나 ‘미시파시즘,’ 즉 생활 세계 속의 파시즘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는 거의 100%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개혁의 지평이라고 할까요. 민주적 개혁, 민주주의의 인식지평을 생활세계영역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최근의 동의 대사태나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던지는 논의들은 그 점을 조금 넘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시각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단은 폭력이라는 프리즘으로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9.11테러 이후에 전개되는 부시의 반테러 보복전쟁의 와중에서 빈라덴이나 알카에다 집단의 폭력과 반테러집단의 폭력을 동일한 폭력으로 규정했을 때 그것이 갖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을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 논의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의 파시즘, 이런 정치적 파시즘이나 제도적 파시즘이 있을 때, 그것을 박정희 체제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권 혹은 권력집단 일부의 제도적이나 정치적 폭력성만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파시즘적 성향, 의식과 심성(mentality)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과 일상적 삶 심층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고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임지현씨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파시즘의 아비투스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상적 파시즘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파시즘이나 제도적 파시즘만 보지 말고 일상세계의 파시즘과 억압성을 다 포함해서 보자는 이런 겁니다. 저는 그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를 과잉 확대해가지고 제도적 파시즘과 일상적 파시즘을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하는 경우에 의도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상적 파시즘의 극복을 동시에 시도하지 않는 한 정치적 파시즘이나 일상적 파시즘의 극복 노력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논의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부식씨도 이야기합니다만, 광주항쟁이라는 것에 대해 그 당시에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 지금도 유산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주의적 감정에서, 예를 들면, 광주시청에서 만든 광주항쟁비디오가 대구경북교육청에 배부가 되었는데, 그 비디오가 대구경북교육청 창고에서 폐기 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전두환 일당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상의 파시즘을 성찰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정치적 파시즘 극복노력은 허구다. 이렇게 된다면, 이진 뉘앙스가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혹은 더 나아가서 일상적 파시즘을 성찰하지 않는 진보진영은 정치적 파시즘 진영과 동일한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논리로 간다면

이건 뉘앙스가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과잉해석하면, 국가적 파시즘, 전두환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박정희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 파시즘의 비국가적 토양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동일한 차원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요.

다음으로 과거청산의 과잉인가, 과소인가입니다. 그런데 제 논의의 연장에서 보면 87년 이후의 과거청산이라는 것은 거시적 한계에 의해서 과거청산의 과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청산의 과잉이라기보다는 부단히 과소화의 경향으로 치달아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의대 사태 같은 것이 부각이 되니까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원회도 한나라당이 추천한 변호사들이 들어가게 되어 훨씬 더 험난하게 될 것같은데..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할 때도, 예를 들어 서울대 김경동 교수를 추천한다든지 조금은 부흥하려고 애쓴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 바뀐 거죠. 제가 쓰는 개념으로 최근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신보수화 국면이다, 한국적 신보수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존재론적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과거청산은 불가피하게 국가화를 수반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부식씨도 국가에 의해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광주·만월동의 국민묘역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국가화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제기는 경청하되,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국가화를 과잉이라고, 과잉의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과거청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가화와 제도화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청산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의도 여부를 떠나 과거청산이 이루어지면 국가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는 겁니다. 과거 시민사회 내에서 저항의 이슈로 남아있던 것이 국가에 의해서 포섭되는 거죠.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철저하지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광주묘역이 국가화될 필요가 있느냐, 국가적 기억으로 광주기억이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느냐, 시민적 공공적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광주항쟁의 학살자도 묘지에 묻히고 피해자도 국립 묘지에 묻히는, 이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순적 상황은 민주적 투쟁에서 만들어진, 그러나 반쪽승리로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는 박탈도 하고 말하자면 단절도 해야 하지만, 가해의 진상규명 및 처벌과 분리되는 형태로 전개되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87년 이후에, 87년 6월 항쟁의 좌절이 낳은 이중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쪽승리라 이거죠. 동일한 것 같지만 반쪽 실패로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반공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 빼면,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지난 유공자입니다. 이제 민주유공자가 되면 저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주가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차세대에게 그런 방식으로 전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4.19혁명이라는 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세대들은 그걸 시민적 기억으로 전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국가화나 과거청산이 가져오는 새로운 딜레마와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국가주의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국가가 뭐냐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빨란짜스라든지, 뭐 이런 논의들을 원용하면서 국가라는 것은 사회내의 권력관계나 계급투쟁 관계, 사회관계가 반영되는 복합적이고 모순적 구성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복합성과 모순성이라는 것은 보통 맑스주의나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국가의 계급성 테제와 대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국가의 계급성이라는 것은 독재정권처럼 일사불란하고 전일적 양식으로 관철되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모순적 양상으로 관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국가가 자본주의 사회국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가 채벌개혁을 하지만 자본주의의 커다란 거시적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국가의 복합성과 모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제 관점에서 문부식씨가 얘기하고자 했던 점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또 이런 것을 얘기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부식씨가 민주화운동의 국가화를 통한 민주화운동의 박제화를 염려하였

다고 하면, 필자는 오히려 민주화운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또는 왜소화 될 수 있는 진보의 차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화운동이 성취하고자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여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운동은 민주주의로만 환원될 수 없는 여러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 사회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화된다'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그것들을 현재의 운동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화운동 관련단체의 몫이 아니라 현재 운동에게 넘겨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진보의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부식씨가 제기하고자 했던 것들, 미시파시즘이라든지,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폭력과 싸우면서 진보운동 내부에 정착해온 다양한 왜곡성이죠.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진보운동내부의 비민주성이라든지, 운동의 거대 조직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관료층, 몇몇 운동적 과제를 암송하고 끝내버리면서 지적 고민과 토론을 질곡하는 일부 학생집단의 비지성주의적 태도, 프락치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혐의자를 폭행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행태, 그 안에 보여지는 우리 안의 폭력,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모두 정당화된다고 하는 목적주의적 경향, 진보진영 내부에 문화화된 파시즘적 요소, 80년대 이념화된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직성, 일체의 정치사상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주의적 경향들을 저는 성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경향의 내적 문제점은 폭력이라는 언어로 접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화운동에서 절박한 사회적, 역사적 과제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정신, 이타적 에토스가 기본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80년대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면 이런 이타적 에토스를 부활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대 학생들이 자신의 학벌적 기득권을 버리고 노동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운 정신으로 저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정말 문화적 건축물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낼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이런 정신이 조형물로 만들어졌을 때는 박제화되는 면이 있는 것이지만 말이죠. 참 그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레마를 안고 우리가 뭐 전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손호철** :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세시간 정도를 월례토론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시간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쉬는 것은 이른 것 같고요, 일단 그 토론자들의 한마디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조정환** :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희연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아주 장문의 글을 읽느라고 제가 고생도 적지 않게 했는데, 배운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아마 조희연 선생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라는 그런 청탁으로 알고, 최대한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명료하거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제 발제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조희연선생님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리얼리즘적 시각에서, 아주 현실주의적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민주화의 실질적인 진행과정을 국가수준에서 성찰하는 것으로 서술이 됐다면, 저는 민주화를 표현주의적 방법으로 아래로부터 바로 그러한 현실주의적 전개에 미치는 힘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말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나눠드린 토론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정부 수립 이후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억압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부정적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과거청산이 긍정적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피억압자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들의 투쟁에 대한 기념과 그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인권차원에서 예방적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희연 교수가 발제문에서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고 있는 네 가지 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희연교수가 이론적 수준과 역사적 수준 그리고 실정적 수준 모두에 걸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법안의 입법과 실행의 과정은 비록 국가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수희생들의 상충과 타격, 그리고 조절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발제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청산의 공간은 구지배블력의 구성원들과 분파들의 전략적 행위들과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반구체제세력의 저항행위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공간에는 95년에 전개된 광주 학살자 처벌투쟁에서 유가족들의 400여 일에 걸친 농성투쟁이라는 아래로부터

의 투쟁과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지배를 쇄신하고자하는 지배세력의 갈등과 알력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에서의 운동은 시민단체가 발의하고 청원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입안하여 국회나 국가기구에 진출한 민주화 개혁세력이 입법시행에 앞장섬으로써 위로부터의 보수적 힘과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과거청산운동으로의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유력한 모습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눈감을 수 없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 특히 폭력적 억압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반공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에 기대어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기관들의 범죄가 이 운동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과 처벌이 거의 뒤따르지 않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인데 과거청산 공간의 현재적 한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정된 사건만도 오늘 발표된 장기수에 대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사망 외에 박영두 사건, 한희철 사건, 임기운 사건, 김중배 사건, 최종길 사건 등인데 다양한 형태의 국가기관들, 수사기관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민청학련, 미문화원, 삼민투 사건, 동의대 사건 등 일부의 학생운동과 전교조 및 해직 언론인 등 지식노동자들의 운동 그리고 전태일과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 산업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선정해서 그 명예를 회복하는 등 학생, 노동자, 지식인의 운동에 채워진 반공주의적 족쇄를 풀어내었다고 보입니다.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는 동의대생들의 투쟁이 심의위원회가 말하는 민주화, 다시 말해서 69년 이후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서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고 하는 결정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한국군대사에서 오는 운동들의 더 많은 부분들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년의 시간들을 통해 민주화운동이라고 인



정되어 온 것들은 민주화 운동을 빙산에 비유할 때 그 얼음조각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민주화 정의는 시간한정과 반민주세력설정, 활동의 목적설정, 그리고 주체개념의 정리 부재에서 중요한 제한과 변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자유와 자유를 생산하는 다중(多衆) 자신의 일체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로 민주화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화 개념에서 보면 심의위원회에 심의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민주화운동들이 있을 것이며 기각된 것 중에도 그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중 자신의 운동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심의위원회는 항상 다중을 배회하려는 다양한 세력의 정파투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부식씨가 지적하듯이 동의대사건에는 경찰관사망이라는 인명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인명은 고귀한 것이고, 특히 경찰관들은 그들이 떠맡은 억압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복을 입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 투쟁이 높은 극성에 의해 움직일 때, 경찰들을 저항의 편으로 흡인하는 힘 또한 그만큼 강해진다는 사실을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대사건이 민주화운동임을 승인하면서도 그것이 덜 폭력적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문부식씨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납치와 감금 그리고 고문은 그것이 설령 프락치로 의심되는 사람이 그 대상일지라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가테러가 지금까지 인류에게 보여온 가장 더럽고 능욕적인 모습,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민주적 운동 속에 이러한 테러적 수단들에 대한 유혹과 그것의 모방적 행사가 때로 있어 왔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자유를 생산하기보다 그것을 침식하는 것으로, 근본적 문제는 목적과 수단의 분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해방을 위해서 권력장악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믿음은 권력장악이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수반하는데 그것은 권력이 인간해방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 속에서 전개됩니다. 이 믿음은 권력장악이라는 단기목적을 위해서는 인간해방과 대치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허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기적 목적달성이 비인간적 수단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권력이 인간해



방으로 가는 다리가 되기보다 인간해방을 저지하고 봉쇄하는 기제로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보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분리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직된 폭력, 즉 타율권력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장악해 인류의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해방은 오직 그에 상응하는 수단,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수단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은 국가폭력을 장악하지 않고 이 세계를 바꿀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원천이면서도 그것의 대상이 되어 있는 활력을 만회하고 그것의 윤리정치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권력 속에서 국가권력의 변형을 목표로, 국가권력의 수단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과거청산운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과거청산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미래, 현재와 분리 불가능한 것이고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현재이자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권위주의의 청산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국가권력에 대한 압력과 운동의 국가화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에 압력을 가해서 국가로 하여금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것은 국가를 해체시키고 사멸시키면서 다중의 자유와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반면 운동의 국가화는 운동을 경직화시키고 물신화시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의 활력을 침식합니다. 지금의 과거청산운동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변증법적 메커니즘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이 변증법적 과정의 모순이며,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이 변증법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연교수의 발제문에서는 이 변증법에 대한 긍정이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경제위기나 정치위기가 도래하면 언제든지 쉽게 내던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느 정치사회집단도 준수해야 할 불가역적인 기본선이 되도록 해서 모든 사회행위가 민주주의의 규칙 속에서 행해지도록 하는 투쟁이 바로 민주주의를 역사화하고 국가화하는 목적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현시기 운동의 최대치는 아닌 것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의 삶이 국가라고 하는 환상적 공동체에 투영되고, 그것을 통해서 대의되는 것이지, 역사발전의 어떤 불가피한 단계라는 진화론적 진보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관점은 대의 메커니즘과 그 변증법, 국가의 종합능력을 승인하는 것일뿐 만 아니라 그것에 권능을 부



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국가화되고 우리의 운동이 국가화되고 그래서 국가가 거역할 수 없는 물신으로 권능을 부여받는 반면, 우리의 자율이 정지되는 과정의 반복에 진화론적 진보관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운동의 모든 요소들, 그 자율의 요구를 정지시키고 그와는 반대행동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혁명은 실제로 위로부터 진행되는 혁명이며 혁명의 요구들을 실행하지만, 혁명에 죽음을 가져오는 형태에서만, 즉 파편적으로 실현하는 혁명입니다. 민주화운동들의 요구들은 실현됩니다. 의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과거가 청산되며, 그래서 민주화운동세력이 권력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국가수준으로 진행되는 이 과거청산의 이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과 다름없이 학생이 체포되고 시민이 경찰에 구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직장에서 정리되고 자본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점령합니다. 발제문은 87년 이후의 과거청산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에 신체제의 성격이 구조적 선택 속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적 민주화임을 밝힙니다. 그것의 핵심은 다중의 삶의 확장에 있다기보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가 스스로의 자기의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대중에 대해서 억압적 방식으로 대하는 것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착취의 신자유주의적 실행에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의 자기의식의 수정입니다. 그러나 발제문에서 신체제의 이 구조적 선택성, 혹은 새로운 국가의 주관적 의지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거시적 한계라는 범주 속에서 객관화되어 버리고, 국가는 여러 세력이 갈등하는 중립적 공간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희연교수의 주장대로 국가는 계급적 사회적 세력관계의 반영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과거청산은 권위주의 통치의 부분적 약화라는 긍정적 성과 뒤에서 지금의 정부가 그것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인가, 신자유주의인가를 선택하도록 우리는 강요당합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민주화와 복지화를 대변하는 것은 민주화, 복지화의 제한과 파괴를 수반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상황전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한국 신자유주의형태의 민주주의와 복지차원에서의 우월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과소민주와 과소복지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맞추어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조정되어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수준에서 전개되는 운동의 파편적 실현들을 우리의 것으로 재조정하고 운동을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것으로 되살릴 수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온전히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위주의의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그것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신체제·신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의지를 넘어서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화를 공적 질서화로부터 공동적 협동 활동으로 역전시키는 것을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중사회차원에서 국가화를 넘어서고자 하는 독립된 힘들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들이 국가의 어떤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참여사업으로서라기보다 파견사업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개념설정과 그 적용에서 다중의 자유와 자유를 구성하는 입법집행들의 경우에 반대의견 등을 분명히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퇴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올바른 기억으로 시작된다는 발제문의 기억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의 기본사상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통적으로 기억을 다루는 것은 다중자신보다는 다중으로부터 나왔으나 그것과는 일정하게 분리되는 지식인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국가의 수준에 축장(蓄藏)되었습니다. 국가는 기억을 통제함으로써 다중을 통제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도 기억을 바탕으로 도약해나가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기억은 시간의 특수한 활동성입니다. 그것은 시간에서의 변증이 아니라 부패를 감축합니다. 시간 속에서 특정한 순간의 고립, 그 고립된 시간들의 계기적 축적들이 기억입니다. 삶은 자신 내부에 기억을 갖지만 활력적 욕구가 기억을 제어하고 스스로 기억을 넘어서는 지성으로 활동할 때에는 기억은 지배되지 않고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삶의 출발점이자 동력으로 될 때, 삶은 기억에 사로잡히고 고정화되며 파편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충만한 총체성은 억눌립니다. 기억의 지배를 뚫고 솟아오르는 것은 다중의 활력, 산노동, 생동적 욕구입니다. 기억의 공장인 현실사회주의를 부순 것은 기억 없는, 이데올로기 없는 커뮤니티였습니다. 기억의 거부 속에서, 생동적 공동체가 엑소더스(exodus)의 형태로 구축되었습니다. 만



약 지금도 기억투쟁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해계모니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기억에 대항하며 기억을 넘어서는, 그래서 기념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결과 삶의 존재론적 지평 속에서, 시간의 충만한 총체성으로 살아나는 기성적 활력의 운동일 때에 국회와 정부에서 벗어나 삶의 영역으로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호철 : 여기까지 하시죠.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시간 통제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호기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을...

▶ 정호기 : 오늘 애기의 핵심적 문제가 역시 제가 일하고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애기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의 애기는 제가 있는 곳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희연 선생님이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저는 실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애기를 중심으로 애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자리들이 실제지금까지의 틀 내에서 하지 못하는 애기를 만들어주고 소화를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쟁점들이라는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많이 얘기해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쟁점들과 현재 진행되는 애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민주화뿐만 아니라, 제반 관련된 문제들의 소통의 장으로서 이 자리를 위치 지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청산 프로그램이 최근에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애기를 하였고, 또 선생님께서는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희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많은 내용과 많은 애기는 처음 보는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4.3이나 한국전쟁 때 나타났던 양민학살, 거창문제까지도 과거청산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 축은 민주화라는 쟁점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애기들이 되는 것은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과 의문사진

상규명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은 과거청산이 아까 비공식적 영역이라고 했던 민간영역에서 공적인 영역, 국가의 영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가 지금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고 과거청산을 필요로 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권력이 자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조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법률과 기구들이 제정되고 구성될 당시에는 과거에 대한 사건들을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구도가 형성돼 있었고 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희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시적 구조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실제 과거청산 프로그램들이 작동한 것을 보면, 매우 다른 조건과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측한 범위를 훨씬 넘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였고, 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자체가 곧바로 현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들의 규정과 범위에 대한 규정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신청인들은 개인으로 접수를 했을지라도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사건별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될 지, 아까 진상규명이 됐는지, 아니면 진상규명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그리고 각 사건들이 지닌 진상과 평가기준의 문제, 심사기준의 문제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끝으로 이런 조건들이 다 전제된 다음에 개별신청자들이 관련자가 되는지 여부 등, 이런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지형도, 권력의 지형도나 정치사회적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보다 먼 과거 사건들, 4.19나 부마민주항쟁, 그 다음에 5.18광주민주항쟁과는 좀 다른 조건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이론적 개념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과 실제 과거청산, 현실대상으로서의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은 실제 다르게 위



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고 당연히 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안되면 공론에 쌓이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여기까지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설마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라며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채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큰 흐름으로 밀고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채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아까 역사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역사를 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자료가 진짜 역사에 근접한 것인가, 판결문으로 온 것이 그 때의 역사를 진짜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선배들이 어떻게 감옥에 갔는지 제가 잘 아는데, 그런 판결문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조건이.... 최소로 최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과거 역시 끊임없이 현재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으로서 과거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청산되어야 할 과거는 그렇지 않은 과거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걸 보편적 규정, 객관적 규정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진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성질이 과거청산이 갖는 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청산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상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객관적 기준을, 합의에 기초한 보편성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객관성을 보장받는 것이며, 합의에 기초한 보편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말할 때 주관적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어떤 것이 보편적인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담보될 수 있고, 또 법은 지금의 상황과 정황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고 상반된 입장

을 가진 분들을 모두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사건 처리할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객관적인 건가,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어떤 과정을 다 밟게 되면 더 이상 보편과 객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도덕과 양심을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법의 적용에서 도덕과 양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도덕과 양심 문제를 얘기하는 건지, 그 도덕과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미시파시즘과 일상적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와 충돌하지는 않는 건지, 법과 도덕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제정과 그것의 시행이 바로 계급관계, 사회적 관계들의 반영이라고 말했던 차원에서 보면, 이 법의 적용과 작동 방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또 가지셔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규정과 법률의 적용에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배제와 포함의 방식은 처음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엄격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 역시도 사상적 입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모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강희중 박사님이 쓰신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도 엄격성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화운동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엄격성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엄격성이 내부나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당연히 최소주의적 해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점을 이미 만들어 내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다수 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갈등으로 남아 있고, 이걸 간단하게 인식의 전환문제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단죄했던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일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법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이걸 다시 뒤엎는, 그래서 이 두 법이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것은 조선생님 얘기대로 과거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현존하며 현재 정부가



갖는 특성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이 청산과정은 과거청산을 말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 망각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했고, 보상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과거 일을 정리하여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차적 수준과 유사한 비극과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 그리고 현재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를 둘러싼 갈등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과거청산의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기념사업에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준비해서 판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다양합니다. 단지 명예회복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판정결과가 정치사회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큰 범주로 이것들 모두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갈수록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지금 잘 알다시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안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동의대나 전교조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소용돌이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활동은 있으나 이것에 대한 학술적인 평가나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잡아줬을 때에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관련법들을 처음 만들었던 시기로 돌아가서 한번 회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무엇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졌는가, 유가협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었고, 그 힘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



나 지금 그게 가능한가, 저는 저희들이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내보이는 반응 자체에서 이미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조건에 우리가 처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짚고, 이 문제들을 다시 제기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손호철 : 한 분만 더 토론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손석춘 : 조희연교수님이 워낙 민주화운동이나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기에는 좀 주제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발제문을 꼼꼼히 읽어갔는데, 마지막까지 읽어갔는데도 뭐하나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참 초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꼬투리 잡을 게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이행이후 전개된 과거청산작업은 제 3세계에서 과거청산의 한 좋은 전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기의 비리로 구속까지 되고 다시 역전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한국사회의 과거청산이 제 3세계에서, 그것도 좋은 전범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했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화이행이나 과거청산의 문제를 쫓 다루신 것에 대해 굳이 제가 논평을 하자면, 민주화이행의 주체, 과거청산의 주체, 그런 주체에 대한 성찰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이행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설 때 최소한 국가보안법만 없었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어설픈게 살아 있죠. 주체에 대한 성찰로부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상징적으로 80년대 70년대 해왔던 두 김씨가 집권을 한 이후에 총체적으로 두 사람 다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민주화이행이나 과거청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롭게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주체를 발견하고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또 한 가지는 민주화운동의 현재화, 미래화사업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화 사업 또는 미래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 저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목에 대한 언급이 안보여서 그에 대해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화이행이 지금 굴절되고,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듯이 군부독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박정희 미화작업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그런 것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과거청산이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조교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손호철** : 오늘 토론자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두 분, 조정한선생님하고 손석춘선생님만 어떻게 보면 바깥에 계시는 분이고 정호기, 유시춘, 김준곤 선생님은 민주화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요한 국가 기구에서 실질적인 일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은 사실 바깥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손석춘선생님하고 조정한선생님은 바깥의 좀더 큰 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일단 나머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틀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점은 바깥에 있는 분들, 또 floor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곤** : 제가 대구에서 변호사를 쫓 하다가 4월 달에 한성범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쫓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서울에 오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은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사실 지금 많이 얻어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아직까지 한 35%에서 45%밖에 안됐다, 제가 왜 이런 느낌을 갖는가 하면, 국회에 민주화 세력이 한 30% 내지 40%정도만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지 않느냐, 그 나머지 60% 이상은 과거의 소위 말하자면 반민주 세력들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 또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을 접촉해 보면, 전혀 의식의 변화가 없다

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겪었던 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진정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독재시간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독재를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게 가슴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과거 독재정권에서 함께 직·간접적으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들을 이 기관들로부터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규명위원회에서 사건 하나하나 발표하고 난 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또 대구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전화를 해서, 밤길을 갈 때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사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계속 들으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독재정권시절에 겪었던 그 정신적인 어떤 공포가 아직까지 마음 속에 남아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고 독재정권에서 같이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아직도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것이 서명거부였습니다. 서명날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첩사건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의 건에 대해 그 대공수사관을 소환할 수는 없다, 대공수사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전 엄청난 비밀인데, 또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언론에 유출하는 것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 대공수사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들이 원하는 데로 되어간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날인을 거부하고, 여비지급도 국고낭비라고 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돌아가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단체의 조사에는 응할 수가 없다하면서 왔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있습니다. 이미 사면복권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전과자가 있는 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의 조사를 위해 누구누구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니깐, 국정원에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내용이 뭐냐면 전과자가 있는 그런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요. 또 과거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문을 자행했던 퇴직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면, 세상이 달라지면 내가 당신을 조사할 것



이다. 나는 간첩을 잡은 애국자이다, 또 간첩을 고문하는 것은 애국적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특권의식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 당시 의문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다, 또 그냥 사고사다, 이렇게 종결지은 기관이 군의 문사 이외에는 일반적인 경우 검찰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 당시 나왔던 자료를 모두 검토해보면 이건 당연히 자살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살이 아니고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가 사건을 종결했다던가, 또는 노동탄압사건 같은 경우, 공안검사가 관여하여 상당히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가담하고 그런 게 보일 경우, 우리가 소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범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온 이후, 우리 위원회에 기조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전·현직을 불문하고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강공으로 밀어붙인다고 할 지도 모르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기조에서 조사를 해나가고 검찰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동행명령을 하고,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검사들이 보이는 대응은 검사들은 오직 검사 앞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치외법권적인 것이 되지요. 너무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 와서 얘기를 하면 녹음해 가라, 이런 식이에요. 너희가 수사를 아느냐, 너희가 조사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법만 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주화, 과거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굉장히 무시하고.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조희연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민주화가 되려면, 과거에 죄악을 범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추방을 하거나 공직에서 다 물러나게 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환수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누렸던, 반민주적 행위, 소위 말하자면 많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탄압을 하고 목숨을 앗아가는데 관여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청산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현직 국회의원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조차도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는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옥사사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다섯 명입니다. 이들은 빨치산 출신도 있고, 남파간첩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50년대 초반에 구속되고 난 뒤에 사형선고되어 사망하기도 하고, 무기로 된 사람들은 4.19혁명

이후에 20년이 감형이 됩니다. 그럼 70년대 초반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를 앞두고 보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밖에 내보내면 안된다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사상을, 머리의 생각을 철저히 바꾸어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폭력을 행사하여 죽고, 폭력을 견디다 못해 죽기도 하고,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해 혈서를 쓰고 죽기도 합니다. 저항하면서 단식을 하게 되면 온몸을 묶어 놓고 호수를 쏘아 음식을 강제로 투여하다가 그것 때문에 음식이 폐로 들어간다거나 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 강제급식하다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고,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폭력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상전향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냐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한사람은 내 북에 가족이 있다, 내가 사상을 바꾸게 되면, 무슨 사상과 관련 없이 전향서를 쓰게 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사회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만기출소하고 난 뒤에 다시 보호감호에 들어가게 되는데, 첨에 만기출소 한 뒤에 보호소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 저축도 하고, 나도 상당히 적응을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갑자기 보안처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엄청난 좌절감, 희망이 꺾이는 그런 상황에서 서중식씨와 같이 단식투쟁하다가 죽었습니다만, 이런 걸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의원들은 민주화라는 것은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높은 가치를 향해가는 게 민주화운동이 아니냐, 어떻게 국가 공권력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상전향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민주화운동했던 사람조차도 다 폄하된다. 간첩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회에 아직까지도 60%이상의 비민주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빌미를 주는 건 안 된다하는, 심리적으로 뭔가 주변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민주화가 3·40% 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판을 달고, 우리가 너무 일찍 군화를 풀고, 너무 일찍 무장해지하지 않느냐, 새로 군화를 조여 매고, 민주화를 위해 새로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유가족들이 법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심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민주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락호락 법 개정하는데 그냥 해줄까, 그런걸 볼 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라든가 국정원에 실제 조사나가 보면, 이 기관들이 국민을 섬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국민이 알고자 하면,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공직에서 할 일이고,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추호도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직에 충성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굉장히 고압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과거의 엄청난 비민주에 동조했던, 특히 검사 판사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과거 독재 권력에 협력했던 그 사람들이 현재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검찰 쪽에 고위직들이 많이 있고, 저도 지금 법조의 한쪽에 담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주권재민의 사상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은 저 산 밑에 있고, 자기는 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이런 걸 들어볼 때,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4년마다, 5년마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만, 판사·검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세력에 서서 당당하게 과거청산문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위원회는 과태료부과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긴 뭐냐면 산에서 금광을 캐려 한다면,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이yna마이트도 있어야 하고, 또 굴착기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그런 기관이 관여했던 범죄를 캐는데, 더 큰 권한을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산에 금광을 캐기 위한 적당한 연장들은 안주고 꽃삽하나 달랑 손에 쥐어주고 산에 가서 금광을 캐라,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위원회의 활동마감이 다가오지만,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끝날 것 같고, 유가족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디만, 과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모 든 사람들이 다시 신발 끈을 매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 손호철 : 국가인권위원회 유시춘위원 토론해주시지요.

유시춘 : 먼저 조희연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만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국가위원회법의 과거의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처한 현실, 아울러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9월 18일이면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실천 명령은 어떤 것인지, 그대로 종료되고 말 건지, 어디서 이 법정신을 이어받아 그것을 승계할 수 있을런지, 이런 실천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과거청산 작업을 독재와 권위주의의 억압의 기억과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억을 새로운 세대에 전승해야 되는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또는 그 주변부의 소수의 기억으로부터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 전환해 내는 문제, 이것이 과거청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골짜기에 반공기념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주의적 행태가 해방 50년 동안 우리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적 역할을 했던 것을 봐왔습니다. 바로 그런 반대의 기점에서 소수의 기억으로부터 국민의 기억으로 전환하고 확장해내는 이 과거청산에 저는 국가주의가 도입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홀어진 기억의 편린을 모아서 정치적 역사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개혁이나 과거청산의 지평을 여는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의 최대주의적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물은 많습니다.

최근 문부식씨의 제기는 우리에게 그 메크로 파시즘과 마이크로 파시즘에 대한 성찰의 마당과 기회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적 폭력과 저항폭력의 등치 내지 등가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직면하였던 문제들은 인권위원회도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의 경우에는 전교조나 동대사건에서 보듯이 과거민주화운동의 평가에 대해서 수구집단들의 세력적 저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대의명분 자체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세력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권위주의적 통치의 수단이 되었던 권력기구들의 조직적 저항에 맞닥들이



게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실제 활동은 4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의문사나 보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 미시적의 장애요소들이 우리 인권위원회에도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주한미군 2사단에 민중의 소리기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 인권위법 상에 따르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 2사단장에게서 돌아온 편지는 외교통상부를 거쳐라 하는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묵살을 하고 소파규정에 의하더라도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 등 기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견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가야될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딪힌 가장 급박한 문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시한이 9월18일로 종료됩니다. 이 활동이 국회 상황을 미루어 보건데, 저 파행과 이수라장 속에서 이 법이 개정될 희망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면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사인을 90%이상 풀지 못 한 채, 미지로 남겨두고 종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전부 연대해서 훗날에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문사진상규명위 한 상범위원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것을 봤는데, 끝 부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은 이 부분을 승계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국가인권위원회 법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실천의 방법과 영향의 문제에서 연대를 하고 힘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희연교수님이 발췌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할 문제는 여전히 민주화가 진행 중이고 우리가 포위된 기득권세력에 의해 포위된 개혁 속에 있다는 위기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민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호철** : 다섯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 이런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주의적이고요, 거꾸로 민주화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적극적인 거죠. 이건 단순한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데서 국가주의,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석춘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조희연 선생님의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조정환 선생님은 다른 입장, 그러니까 국가화에 일정하게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개 정도 화두를 말씀을 드리고 청중에게 문을 열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현재 과거청산과 관련된 기구들에 있는 세분의 이야기는 큰 틀 안에서 각 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실질적 문제점, 그리고 조희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 힘관계의 응집이고 모순된 것인데, 그런 힘의 관계의 응집이 국가기구 속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한계에 부딪혀 있는가를 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하실 분은 해주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큰 틀에서 문제를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화와 제도화는 불가피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희연 선생님이 재미있는 제목을 다셨지만 과거청산 과잉이나 과소냐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해봅시다.

▶ **김준곤**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지금 85건 중에서 한 20건 정도가 아마 미제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불능의 사유가 중요한 참고인, 중요한 증인들이 외국에 이민을 많이 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인을 보내면, 조사를 진술을 거부한다던가,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조사에 걸맞는 권한만 있어도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텐데, 소위 말하자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던가, 구인장이라던가, 또 구속영장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더라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화 강제징집 같은 경우는 기무사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떻게 고문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의 제출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강압을 했는데, 자료가 입수되



지 않아 진상규명이 불능이 됩니다.

그럴 경우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저런 사유로 진상규명불능으로 종결되게 되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에 민주세력들이 다수가 될 때, 조사권한이 강화된, 진상규명에 걸맞는 새로운 법이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 진상규명 불능으로 종결된, 일시적으로 보따리를 싸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따리를 푸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상규명불능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다시 법개정을 하고, 다시 법제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종결짓는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 민주화의 미완, 아까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했습시다만, 아직도 민주화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활동 시한 마감이가 다가옵니다만, 그 정도 한 20여건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종결될 것 같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민주화를 위해 더 투쟁해야 될, 더 힘써야 될, 어떤 상징적 과제가 될 것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구두끈을 다시 매야 한다는 것ですよ.

▶ 손호철 : 조희연선생님 답변에 앞서 질문을 받고 혹시 토론자중에 부연설명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간단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 질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의 민주화와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국가권력의 최소화하고 개인자유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가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세력, 개인의 자유에 반대되는 악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조희연선생님은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의 국가화라는 그런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아니면 조정한선생님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조정한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요. 국가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운동을 국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지적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조희연 : 지금 조정한선생님 경우는,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는 자율주의, 탈국가주

의적 자율주의라고 할까, 이런 관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민주화의 성과로서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건데, 그것조차도 운동의 국가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말하자면, 운동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국가민주화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운동의 성과로서 부분적이지만, 또 계급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국가민주화가 진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주의라는 것으로 또는 운동의 국가화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정환선생님은 국가에 대한 압력과 압력운동과 운동의 국가화는 다르다고 얘기를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압력운동에 대한 결과로 국가가 일정한 개혁을, 자기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의 활동이라는 것이 인권운동을 국가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비국가 영역에서 인권운동이 했던 것이 상당부분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 틀 내에 포섭되어 간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본질적인 딜레마는 본질적 딜레마로 인식을 해야지, 그것을 지금 현재, 이런 과거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들에 바로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문부식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백한 대치선이 있는 것이죠.

▶ 김경남 : 그러니까 조희연선생님은 운동의 국가화는 아니죠?

▶ 조희연 : 김경남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제 입장이예요. 지금 조정환선생님에 동의할 게 아니라 제게 동의해야 해요.

▶ 손호철 : 운동의 국가화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의 국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조정환선생님은 운동의 국가화는 피해야한다는 것이고요. 제도화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화석화된다는 얘기예요. 화석화되고 정신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다는 얘기지요, 민주화운동이 정신은 없어져버리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3.1절이라면, 그 정신은 없어져버리고 잊혀져버리는, 운동의 정신은 없어지고 완전히 틀만 남아 버린다, 형식화된다는 이런 뜻으로 쓰인거죠.

▶ 조희연 : 저에게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20세기 운동의 역사



를 보면, 여기 다중이라고 표현하셨던, 다중과 대중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그 시기시기마다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대중들의 해방을 위한 어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운동 내지는 노조운동, 노동운동에, 저는 그것을 계급적 역동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class activism'으로 표현했지만, 거기에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전후 사민당의 집권으로 나타난 거죠. 노동자들의 집권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조정환선생님의 표현으로 하면, 노동운동의 국가화를 내포하는 거죠. 사민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진보이지만, 그러나 20세기 전반부에 대중들의 역동성이 국가로 포섭되어버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사민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역사의 진보고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획득된 결과는 불가피하게 제도화와 국가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 내의 포섭, 이런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피하고, 거기에서 지금 조정환선생님이 얘기하는 다중의 역동성, 해방을 향한 다중의 역동성은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후에 신사회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표출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기 변증법이 있는 겁니다. 지배의 변화와 운동의 변화라는 변증법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서구적 맥락에서 보면, 신사회운동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지금 상당히 국가의 개혁의제로 포섭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20세기말, 21세기 지금 현재 다중의 역동성은 다른 출구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공동체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도 저희가 봐야할 것은, 그럼 노동운동의 모든 게 다 제도화됐느냐. 노동운동은 여전히 한편으로 탄압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신사회운동의 역동성과 요구는 또 계속 역동성으로 남아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시지프스의 명예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어떤 의미에서 본질주의적인 잣대를 투쟁에 바로 대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바로 도입하게 되면, 약간의 왜곡이 나타나게 아니냐, 어쨌든 저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 손호철 : 저는 국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힘의 관계가 반영이 되어서 국가 속에 제도화되고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화석

화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문제는 실현되어지지 않는 국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국가화의 특수한 형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문제는 계속 남아있고, 그런 관행들은 계속 남아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거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청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화에 대한 우려거든요. 정상적 의미의 국가화, 바로 국가 속에서 그 정신이 실현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운동이 소용없어지는 의미의, 정상적인 의미의 국가화라면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도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리에 서는 계속 노동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가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심사하고 민주화기념사업법을 두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국가화는 문제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국가화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 **조정환** : 저는 국가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왔으므로 우리가 국가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규명한다는 측면을 넘어 국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원리적인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본질주의적인 접근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의 활동처럼, 국가자체가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활동은 작은 긍정적 효과에 비해서 오히려 커다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양태는 우리 운동이 아주 극한적 상황 이외에는 취하지 말아야 할 어떤 특수한 운동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준곤위원님께서 검찰이라거나 안기부, 국정원의 종사자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중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위에 서서 오히려 다중을 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가적 제도화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중들도 다양한 욕구들이 상충하고 보존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라고 부르는 그 어떤 유형의 메커니즘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커니즘은 국가가 갖는 제도와는 좀 달리, 아까 순환이라고 했지만, 항상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갖는 느낌, 한번 정해지면 끝이다라는 그 어떤 느낌,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불가항력성 소외감까지는 느끼지 않을 수 있지요. 내가 내일이면 다시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의 힘과 오늘의 희생만큼 이것을 구축하고, 다시 내일 만들



고 구축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들이 그 제도에 너무 큰 권위나 위엄을 주지 말자는 것이죠. 아까 유시춘선생님께서도 민주당의 추천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인권위원으로서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들의 결정과정 자체가 그러럼 아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추천에 의해 되었다면, 과연 그 기구가 다중들의 이해관계와 얼마나 결부되어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기구 등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여지는 조희연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을 국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원이 되고 국가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동화되어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민운동의, 인권운동의 어떤 힘의 투영으로서 그 운동의 확장이라고 봐야하겠죠.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그것의 확장으로서 결정되어질 때, 그 성과가 다시 운동으로 돌아오면서 운동효과라는 형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가 속에 완전히 포위되어 진다는 느낌을 가질 만큼 고립되어 있을 때는 그 운동의 지평은 확장되기 힘들지요.

▶ 조희연 : 제가 조금 덧붙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운동의 국가화’라는 것은 문부식씨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명예회복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실 운동의 국가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운동의 국가화라는 개념을 국가주의를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는 과거청산투쟁을 운동의 국가화라고 규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따옴표 친 ‘운동의 국가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여도, 그것이 불가피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회복, 의문사, 이진 운동의 국가화가 아닌데, 잘못된 개념을, 과잉개념을 사용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조정환선생 같은 경우는 명확히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문부식씨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히 그런 입장을 전제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일종의 탈근대론적 문제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근대주의 속에는 국가주의 같은 것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비판하려는 관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대성에 억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근대민족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억압적입니까.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적 표준어입니다.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표준어가 얼마나 억압적입니까. 그 억압성이 있으니까 최근의 탈근대론도 여러 가지 지류가 있지요. 아주 우파적 탈근대론도 있고 맑스주의적 탈근대론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진경씨나 조정환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급진적 탈근대론인데, 저는 그 문제의식을 일정한 공감하지만, 우리사회에 근대성을 둘러싼 투쟁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탈근대의 문제의식을 바로 이러한 현실에다 대입해서 혼란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 **조정환**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조희연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어떤 현상 진단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이 87년처럼 생활할 때에는 그게 국가속으로 화석화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운동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더 이상 폭발할 수 없을 때에 그 힘들어 권력당사자들에 의해서건, 아니면 운동의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운동활동가들에 의해서건 국가화의 문제를 둘러싼 어떤 타협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라거나, 민주노동당이라거나 하는 운동의 조직체가 있는데, 그 경우, 그로부터 배제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임시직 노동자들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창출되어 가지고 실제로 제도화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제되어가는 차원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 대표를 노조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립보다는 연합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의 표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 속에서 서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지금과는 달리, 아주 적대적인 형태로 제도 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부분과 국가속으로 들어가는 운동, 즉 국가화된 운동 사이에 적대가 표현되고 양자간에 화해할 수 없는 전선이 그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프롤레타리안 운동이 국가로 결집되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91년도에 그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보면, 소련의 대중들이 탱크 앞에 서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군인들을 인의 장막을 쳐 봉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탱크 앞에 있는 군인이나 공산당에는 공산주의가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 바깥에, 보수파의 어떤 정권재창출 노력을 지지하려고 하는 시민들 속에 오히려 어떤 공산주의가 있었다고 말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천안문의 89년도 마찬가지고요. 적대가 표출된 어떤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어왔는데,



과연 국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적대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는가를 말하고 싶고, 오늘날 이미 그 변화들은 민주노총의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불완전노동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 속에 맹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자가 어떤 상호간의 긍정적인 성과, 때로는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병렬적으로 두 가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화가 갖는 물신화의 힘, 경직화시키고 운동을 권위주의적 틀 속으로 가두려고 하는 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중차원 속에서 재융합하고 재창출되는 과정, 아마 김준곤선생님도 그런 애길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신발끈을 매는 형태로 과거와는 동일한 형태가 아닐지라도 그런 방식의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양자간의 적대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훈 :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교육부장으로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된 측면을 말할게요. 국가인권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런 건 다 성과거든요. 성과인데, 그것들이 아까 조정환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얼마나 겨안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호철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박제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 있는 단체들이 다 80년대 우리가 이슈로서 얘기를 한 것, 화염병, 돌맹이 던지면서 요구한 것이 실현된 것이고요. 80년대 돌맹이 던지면서 전두환이 물러나라 그랬는데, 의문사진상위에서 전두환한테 소환을 내잖아요. 그런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우려의 지점은 지금 이 단체들이, 투쟁을 통해서 생긴 단체들이 박제화될 것인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연례적으로 기념하는 4.19라든가, 4.19는 물론 기념해야죠. 그거에서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우리의 영역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투쟁하는 영역들로 확대해서 끌어들이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박제화라는 우려는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가인권위도 우리의 성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성, 활동과정을 보면, 아까 선생님들께서 국가기구와의 대립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한편 인권단체의 대립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비판했던 세력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의 국가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지점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인권운동을 같이 하시면서도 비판적인 사람들을 끌어안느냐 끌어안지 못하느냐, 끌어안지 못하면 그것은 박제화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운동의 국가화가 갖는 우려들, 모순들,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여기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가인권위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설사 5년, 10년 후에 조직이 있다해도, 투쟁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뭐하냐'라는 얘기를 항상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지금 기념해야 될 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5년 뒤나 10년 뒤에도 '야 그 단체는 정말 필요한 단체야,' '국가에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 놔더니, 이런 사업회나 인권위를 만들어 놔더니 정말 우리의 이슈 같은 것들이 융합되고 화합되고 우리의 모순들을 완화하는데 정말 힘이 되는 단체가 됐어'라는 평가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한편으로 성과를, 다른 한편으로 우려를 같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예견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80년대, 70년대 민주화를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국가인권위나 기념사업회 등이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무명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김보훈기자님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조정환선생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운동의 국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길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똑 같은 얘깁니다만, 간단히 부연하면, 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크지는 않지만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같은 얘기입니다만, 박제화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또한 하나의 운동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호철** :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간단히 저도.. 예.

▶ **조배원** : 조정한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조정한선생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혹시 제가 근대라는 범주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정한선생님의 토론문을 보면서 다중, 다중의 자유와 자율, 자율주의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단어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벅찬데요. 그러한 개념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공허하게 다가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판을 그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보면 뭔가 공허하게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를 해체시켜버린 듯한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이런 느낌 속에서 선생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더 듣고 싶고, 선생님 그 토론문 중에 다중자신의 운동이 아닌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다중을 방해하려는 다양한 세력들의 정파투쟁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중자신의 운동이라는 것과 다중을 대변한다고 하는 어떤 운동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지원단에서 심의 내지 심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될 기준과 관련될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 **조정한** : 무력감을 느낀다니까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 입장에 따라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구체적으로 민중, 다중의 운동이 아닌 경우에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중의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과거 어떤 지위 속에서 시혜적으로 베풀 수 있었던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찬탈하려고 하는 욕망을 불러오지 않겠냐하는 것입니다.

▶ **손호철** : 예를 들면 YS단식 이런 겁니다. 그럼 그것과는 거꾸로 전위당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다중과는 상관없이 진행된, 지하 전위당운동. 엘리트들의 운동 등등

▶ **조정환** : 항쟁 당시의 전위당운동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대의적인 어떤 경향에 의해서 쉽게 침윤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대중과 결합하려고 하는 강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희연** : 그러니까 계속 쟁점이 되는 건데, 조정환씨나 예를 들면 문부식씨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즉, 초역사적 쟁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초역사적 쟁점, 관점을 명예회복 그 조항에 적용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는, 원래 명예회복이라는 건 열사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470일간을 국회에서 농성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심의과정에서 해직, 유기정학, 뭐 이런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보수세력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무기정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쪽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동의대 등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동의대사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명예회복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조정환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탈국가화의 문제의식이라든가, 근대성의 억압성을 넘어서는 것들은 현재적 운동이 생각해야 할 점이고, 현재적 운동은 이미 인권운동으로서, 소수자운동으로서, 동성애운동으로서 많이 진열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살려져야 되는 거지요. 문제는 이 과거청산투쟁이라는 현재적 운동이 어떤 기억에서 어떤 조건에서 출발할 것이냐를 둘러싼 투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기억의 진보적 구성을 둘러싼 투쟁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조선일보가 반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 등등의 문제는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구성해서 남길 것이냐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본질적 관점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용은 보수세력의 강화로 바로 가버리는 것이죠.



▶ **조정환** : 한 가지만 말할게요. 국가, 그 국가에 대한 비판이 초역사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호철** : 저도 사회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소화할 거냐. 좋은 의미의 국가화 부분들을 살리고 나쁜 의미의 국가화를 약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인권위원회가, 이것은 조정환선생님이 얘기했던 배제의 문제이기도 한데, 인권운동사랑방이나 등등의 문제제기를 어떻게 포함해서 갈 수 있느냐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화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논의한 국가문제라는 것이 국가기구나 법 속에 불균등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문부식씨만 하더라도 동의대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나 하면, 보상지원단 등을 통한 민주화인정으로 가지 말고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그 용공폭력법으로, 방화범으로 몰린 것에 대한 인정투쟁으로 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권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정당성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인정투쟁적인 의미의 민주화를 인정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특권화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인정, 이 부분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불균등한 법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세적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면, 여기 작명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실현사업회 라야 되는데, 기념사업회 하니까 민주화운동이 마치 끝난 것같이 되어버려요.(모두 웃음)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1차 학술토론회 자료집〉

## 한국의 민주화이행과 과거청산

비매품

펴 낸 이 / 박형규

펴 낸 날 / 2002. 12

인 쇄 처 / 내일기획(02-2279-271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아화재빌딩 3층

전화 : 02-3709-7500 팩스 : 02-3709-7516

<http://www.kdemocracy.or.kr>